

강원건설 '동계특수' 종료

2010년 이후 실적 감소

강원도 건설 공사 수주실적이 '동계 특수' 완료로 감소세에 있어 건설 산업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21일 도 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공사 수주액은 총 1129건에 853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02건 5963억원 보다 4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공사 수주 실적 증가는 지난해보다 재정조기 집행이 활발하게 이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들은 올해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했다.

하지만 연도별 공사 수주는 감소세다.

2010년(1887건) 1조5459억원, 2012년(2017건) 1조2710억원, 2014년(2024건) 1조4286억원, 2015년

■연도별 도 건설공사 수주 실적

연도	건수	금액
2010	1887	1조 5459억원
2011	2141	1조 1367억원
2012	2017	1조 2710억원
2013	2645	1조 4666억원
2014	2024	1조 4286억원
2015	2152	1조 2984억원

(2152건) 1조2984억원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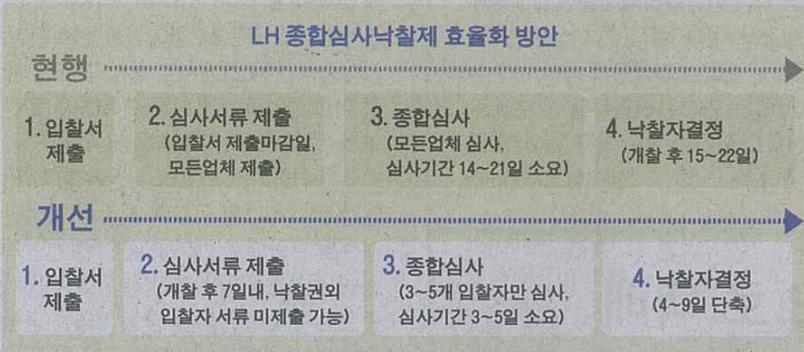
동계올림픽 영향으로 2010년 1조 5459억원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동계올림픽 조성 사업 발주가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이다.

도 건설협 관계자는 "올 상반기 공사 수주 실적은 재정조기 집행 영향 때문"이라며 "사실상 동계특수가 완료됐기 때문에 올 전체 공사 수주도 지난해 실적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LH '중심제' 대폭 개선 입찰업체 부담 줄인다



심사 효율화방안 마련

낙찰 가능성 낮으면
서류제출 안해도 돼
상위 3~5개 업체만 심사
입찰 진행 기간 단축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재 시행 중인 종합심사낙찰제의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개찰 결과 낙찰 가능성이 낮은 업체는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비가격 부문의 종합심사도 낙찰권에 있는 3~5개로 줄여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LH는 발주기관 최초로 중심제 심사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1일 이후 발주되는 중심제 물량부터 적용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중심제 입찰 참여업체는 개찰결과 확인 후, 낙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심사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중심제 입찰 참여업체(공동수급체 구성사 포함 대략 80~120곳)는 종합심사 신청서 등 16종의 심사서류를 제출해 왔다.

LH는 "심사서류 준비에 따른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진주 분사 방문으로 인한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심사서류 제출 기

한을 개찰 후 7일 내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비가격 부문의 심사 대상도 전체 입찰 참여업체에서 낙찰권에 있는 3~5개 업체로 줄여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LH는 그동안 모든 입찰참여업체의 서류 심사를 진행해 왔다. 이는 심사가 최소 2주에서 3주 이상 길어지고, 행정력 또한 낭비되는 문제점을 야기시켜 왔다.

때문에 공사수행능력 등 비가격 부문 종합심사는 입찰금액 점수가 높은 낙찰권 3~5곳에 한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종합심사 기간이 3~5일(11~16일 단축)로 대폭 줄어들고, 낙찰자 결정도 4~9일 빨라질 전망이다.

송준경 LH 계약단장은 "이번 중심제 심사 효율화 방안은 입찰 참여업체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에 따른 시간·비용을 절감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고객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중심제 대상 공사부터 적용함에 따라, 초만간 발주를 앞둔 설계금액 기준 665억원 규모의 '시흥은계 A2BL 아파트 건설공사'가 첫 번째가 될 것으로 보인다.

LH는 이 밖에도 중심제 세부심사 기준에 대한 Q&A 및 하도급계획서 작성 세부시행요령을 전자조달 시스템에 게시, 입찰 참여업체가 심사서류 제출 시 오류를 방지하고 편리하게 하도급계획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토·일요일자 신문 쉽니다

정석한기자 jobize@

‘30억-1억’ 공사 동일한 잣대 적용은 과도

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자 배치기준 손질

상반기 100건 현장밀착형 규제 개선

3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기술자 배치기준이 완화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의 공동수급체 시공실적 평가방법이 구성원의 보유실적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관련기사 3면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올 상반기 이들 과제를

포함해 총 100건의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추진단은 소액공사 현장에 과도하게 적용됐던 기술자 배치기준을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상 3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또는 초급기술자인 경우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사 건수로 따져보면 5억원 미만 현장 비중이 전체의 63%, 10억원 미만이 77%를 차지한다. 공사비가 1억~2억원 수준에 불과한 현장에도 이같은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중소건설사들은 기술자 보유에 따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억원 미만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일부 경미한 공종에 대한 선 배치 기술자 등급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경남기자 knp@ ▶3면에 계속

1면서 계속=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자 배치기준 손질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초급기술자에 대해서는 같은 종류의 현장 경력을 요구하다보니 기술자를 확보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며 “5억원 또는 10억원 미만 등으로 구간이 나뉘지면 기술자 보유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추진단은 지자체 공사의 공동수급체 시공실적 평가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지자체 공사에 대한 시공실적을 평가할 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각자 보유실적에 지분율을 각각 곱한 후 합산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렇다보니 시공실적이 적은 중소건설사의 경우 입찰참여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다.

정부는 중소건설사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보유실적을 단순 합산해 시공실적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연말까지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부동산개발업자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로 했다. 그동안 부동산개발업자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범위에서 제외돼 있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번 규제개선으로 참여 기회를 얻게 됐다.

이 외에도 추진단은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건축사·기술사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기존 KS표준에 맞춰 생산된 철근은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통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총괄계획을 맡고자 하는 건축사·기술사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 돼야 하는데, 정부는 이런 경력요건을 삭제해 건축사·기술사 확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 철근의 새로운 KS표준 예고 고시로 기존 표준에 따라 생산된 철근의 유통이 어려워지면서 철근표준 시행 관련 고시를 오는 9월로 연기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박경남기자

【 2016.07.22(금) 건설경제 】

건협 강원도회, 국방시설본부와 건설산업 발전 간담회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21일 강원도 원주 치악회관에서 이상록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장을 비롯한 시설단 관계자를 초청해 강원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 회장은 출입제한 시간과 절차 등에 따른 애로가 발생하는 민간인 통제선 내 현장 작업여건 개선, 적정공사비 확보, 원활한 설계 변경, 주요 자재의 관급 전환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민통선 내에서는 출입제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 조기에 작업이 끝나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건비 부담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록 시설단장은 “협조 요청 사항에 대해 현재까지 계속 개선 중에 있다”면서 “관계 부대와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애로사항 해결과 강원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상반기 건설수주액 43% 급증

〈지난해 상반기 대비〉

건협 강원도회 집계 8537억 공공물량 조기발주 영향 軍시설 대형 공사 집행 등 하반기도 물량 이어질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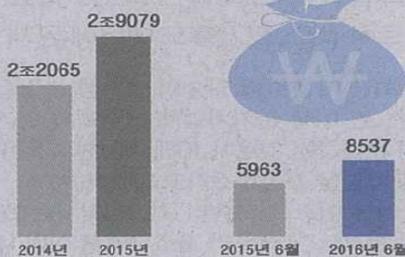
상반기 강원지역 건설사들의 수주액이 작년 상반기에 비해 4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발주처들이 올해 조기 발주에 나서면서 공공 수주액 증가가 두드러졌다.

21일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에 따르면 상반기 도회 회원사의 건설수주액은 853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수주액 5963억원보다 43%가량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도내 건설수주액이 2조9000억원으로 2014년보다 7000억원 정도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건설수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도내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건설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면서 “지난해에 비해 조기에 발주된 물량이 늘어난 게 상반기 수주 호조의 배경”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건설수주액 추이 (단위: 억원)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접속도로 공사와 철도역사 4건, 춘천시청 공사 등 대형 공사들이 줄줄이 상반기에 쏟아져 나왔다.

올해 초반 하더라도 도내 건설시장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했다. 도내 공공발주가 지난해보다 6000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공사 발주도 거의 마무리되면서 수주 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건설수주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자 도 건설업계는 다소 안도하는 모습이다. 최근 서울~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이 확정

된 것도 도내 건설업계의 표정을 밝게 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도 건설시장이 크게 나빠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군 시설 관련 대형 공사 다수가 하반기 공공 입찰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건설 예산 수준을 고려하면 지난해와 비교해 수주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공사 발주가 거의 마무리되는 점도 발주 물량 감소 우려를 키우고 있다. 동서고속화철도의 착공 시기는 2019년이어서 당장 도 건설업계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와 관련, 강원도 관계자는 “동서고속화철도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활황을 보였던 민간 건축시장이 둔화될 수 있는 점도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강릉 지역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가 강릉시 전체 아파트 규모(4만여 가구)의 10%인 4107가구에 이를 정도로 일시에 많이 공급됐다.

권해석기자 haeseok@